

국비 대비 농업예산 3% 확보 '동분서주'

민주 이원택 의원, 이낙연 당대표 등 만나 건의문 전달

"지속 가능 농업·농촌의 미래 위해 재정의 역할 중요"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국가 예산대비 농업예산 3%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서삼석 간사, 김승남, 맹성규,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주철현, 최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지속적으로 만나, 올해 우리 농업·농촌이 그 어느때보다 험악한 상황을 설명하며, 농작물재해보험 및 논타작물 재

배 지원 사업 등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우리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와 올해 54일간 이어진 폭우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는 15만 7,643ha에 달하고, 벼, 밭작물, 채소, 축산에 이르기까지 농업 전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또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수 화상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는 우리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모두의 삶의 뿌리이자, 생명의 원천인 농업·농촌을 위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저탄소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보급 ▲유통·물류 혁신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보급 ▲청년농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 ▲식량안보를 위한 관련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8조원으로 편성됐지만, 농업 예산은 2.3% 증가한 16조1,324억원 편성에 그쳐 전체 국가 예산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가운데)이 국가 예산대비 농업예산 3%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당대표와 만나 건의를 하고 있다.

"고향의 현실 외면 국민의힘 법사위원 규탄"

지난주 국회 법사위 상정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 가로막혀

민주 행안위원 "여야 합의 내용 무시하는 것인가?" 분노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가로막혔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내가 사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담배를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대 국회부터 소관 상임위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돼 왔었다.

21대 국회에 새롭게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대 국회에서 지적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보완했다.

행안위 소위 논의에서 담배품 규정

이 쟁점과 됐지만,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지난 9월 행안위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돼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지난주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좌절된 것이다.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와 지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2소위로 회부시킨 것이다.

법안에서 담배품 제공과 준조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이는 행안위에서 이미 해소된 문제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고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행안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을 문제로 발목 잡는다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분노했다.

이어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 이상 상원 노력을 그만하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어려운 우리 지방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속히 도입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재 농어촌과 지방이 맞닥뜨린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법사위 제소위를 개최해 반드시 처리되기를"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농업 시범사업 투명성 강화해야"

이해연 무주군의원, 행감서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일부 농민에게만 집중돼 있어 사업 대상자를 전체 농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주군의회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은 24일 열린 제28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 관내에서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일부 보조사업보다 보조비율이 높는데 일부 농가에 집중돼 있어 다른 농가의 불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행 시범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일 경우 100% 국비부담, 전북도 시책사업이면 최대 80%, 무주군 자체 시범사업일 경우 7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올해 무주군은 자체적으로 사과 병해충 예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해연 위원장은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 시범사업을 신청 받을 때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신청 받는다고 하더라. 시범사업은 보조비율이 높아 많은 농가가 관심 갖고 있고 서로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한다면"고 말했다.

무주군 기술연구과장은 "시범사업 안내는 예산이 의결되면 농업정책과 수록해 전 농가에 보내고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특정인에게 전화해서 사업을 신청하라는 일은 없었다. 사업 신청량이 워낙 적은 비인기사업은 있었다"며 부인했다.

무주군과 이해연 위원장은 현행 보조사업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지만 보조비율이 높은 시범사업에 대해 공개신청 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해연 위원장은 민선 7기 출범 당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개선 의지가 강했지만 2년을 넘긴 지금 달라진 점이 없다며 무주군에 세부 운영방향을 질의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문경위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승섭 의원)가 24일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및 훈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활동은 지난 6월 철인3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최희현 선수 사망사건 이후 체계적 전반에 제기되고 있는 인권 침해와 관련해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및 훈련장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해 이뤄졌으며, 의원들은 감독과 선수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현장점검에서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의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고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비대면 설문조사와 애로사항 청취를 관련 부서에서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선수들의 인권·권익 보호를 위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됐다"며 "앞으로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은 태권도, 수영, 사이클 등 3개 부가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성과 검토를"

환경위, 복지여성보건국 예산 심사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24일 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시행 시 시설 종사자 21명의 적절한 선정 방법과 기준, 프로그램의 목적 부합 여부,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확대 여부 등 관리체계를 갖춰라"고 요구했다.

또한, "보훈사업의 경우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감소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보훈수당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공평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며, 이와 관련해 타 시·도 및 지자체의 기준과 관련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삭감된 사업예산을 동일하게 2021년도에도 편성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30% 정도 삭감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와 장애인인권 민관합동

실태조사 TF 운영 사업의 경우 실태조사위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태조사의 목적이 인권 침해 예방이나 조기발견인데, 지속적인 확대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고, 실태조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사회복지심부름센터'와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묻고, "업무부담 정도에 따라 인원 배정이 달라야 하며, 2021년도부터 주도적으로 시·군과 협의해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삭감된 사업예산을 동일하게 2021년도에도 편성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30% 정도 삭감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와 장애인인권 민관합동

"혁신도시 내 공용주차장 부족"

농산경위, 혁신성장산업국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4일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제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혁신성장산업국 2021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7억 2,731만원보다 252억8,180만원이 증가한 660억 911만원 규모로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26억8,662만원보다 311억4,418만원(전년대비 증20.4%)이 증액된 1,838억 801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김철수 의원(정읍)은 혁신도시 내 공용주차장이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고 "외부에서 오는 도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 확충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은 혁신도시 내에 어린이·가족 특화 인프라 확충으로 어린이 가족 친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되는 만큼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차원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재난예방 감찰 차량 구입 검토 필요"

문건위, 도민안전실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민)는 24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은 "재난안전 예방 감찰을 위해 임차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차량을 임차하고 있지만, 3년 동간의 임차비가 오히려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한다"고 꼬집으며 "장기적으로 계속 임차할 것인지, 구매할 것인지, 정확한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차량 구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근 의원(전주)은 행정안전부 우수저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의 도내 사업 대상지 중 무주군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 포기 전 전북도의 국비 확보를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